

행정학

해설위원 : 이명훈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01. 다음 중 제도화된 부패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보복
- ② 비현실적인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발표
- ③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의 준수
- ⑤ 부패의 타성화

(답) ④ 제도화된 부패란 잘못된 관행이 일종의 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이러한 관행을 부패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패를 말한다. 제도화된 부패상황에서는 부패가 실질적인 행동규범이 되고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공식적 행동규범이 예외로 전락된다.

《핵심체크》 부패의 유형

	일탈형 부패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의한 부패(개인부패와 연계됨)	
부패의 제도화 정도	제도화(구조 화·체제화) 된 부패	의의	잘못된 관행이 제도처럼 고착화되어 공무원이나 국민이 부패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패(예 : 인·허가시 급행로 지불, 은행에서 대출시 커미션 지불 등)
		특징	부패가 실질적 행동규범이 되고 공식적 행동규범이 예외로 전락, 조직이 공식적인 행동규범의 위반을 조장·은폐 등
부패의 용인정 도	백색부패	선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예;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위기가 없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등)	
	흑색부패	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로,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부패	
	회색부패	사회구성원 중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예 : 과도한 선물수수에 대하여 윤리강령에 규정할 수는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규정하는 것에는 반론이 있는 경우)	
거래의 여부	거래형 부패	뇌물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자와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는 자 간에 금전적 거래가 성립되어 발생하는 부패	
	사기형 부패	공금횡령, 회계부정 등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	
기타	• 부패의 원인 -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 부패발생수준 - 개인부패, 조직부패(조직적 은폐로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음)		

02. 다음 조직이론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 - 상위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될 때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 ② 아담스(Adams)의 형평성이론 - 자신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한 정도가 행동동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동기는 학습보다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 ④ 브룸(Vroom)의 기대이론 - 동기부여의 정도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자신의 특정한 행동이 그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이 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⑤ 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 -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의 제공이 업무담당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성취를 향상시킨다고 본다.

(답) ③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동기는 개인의 본능적 특성이 작용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친교욕구, 성취욕구, 성장욕구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체크》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의의	• 욕구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학습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욕구계층에 차이가 있다고 봄(개인차 고려) •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욕구를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분하고 이중 성취욕구가 높을수록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봄
성취욕구	의의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 특성 • 노력이나 능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상황 선호 • 위험과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인 상황 선호 • 노력한 결과 및 성과에 대한 분명한 환류가 주어지는 상황 선호 • 자기 일에 대한 몰두와 항상 자기식으로 일하려고 함

03. 다음 중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책임운영기관은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관리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③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 ④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⑤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조건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답) ②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의의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유형	• 지위에 따른 구분 : 소속책임운영기관(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중앙책임운영기관(「정부조직법」상 '창' 단위 기관) • 사무성격에 따른 구분 :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	
설치	설치 기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설치 근거	대통령령
	설치 권한	행정부장관이 기재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해제
중기관리계획	행정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인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운영원칙	책임운영기관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유형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신분	•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신분(현재 특허청장은 정무직 공무원) •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제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은 응모 불가) • 5년 이내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2년 이상으로 함
정원관리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함(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 기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 • 중앙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짐(임용권의 일부를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함
예산 및 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규정을 준용함 • 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은 특별회계로, 그 외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 •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행정부장관이 통합관리하며,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됨 •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초과수입금을 직·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음
성과관리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국무총리와 성과계약을 체결함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함
평가	기관장 소속하에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둠(운영위원회의 평가가 우선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를 두고, 행정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둠(운영위원회의 평가가 우선함).

04. 다음 <보기>의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규제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규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피규제산업 또는 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A)라 한다.

- ① 규제기관이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규제순응 여부를 추적·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 (A)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② (A)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규제이다.
- ③ 규제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이 피규제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불가피하게 (A)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 ④ 피규제집단은 여론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자신들에 대한 규제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규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A)를 시도하기도 한다.
- ⑤ (A)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공정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답) ② <보기>는 자율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율규제란 피규제자인 민간이 스스로 합의된 규칙을 설계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자율규제는 피규제집단의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반면 직접규제는 규제주체인 정부가 피규제자인 민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핵심체크〉 규제의 유형

규제의 대상	수단규제	의의	정부가 민간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행위 등 투입수단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규제(투입규제)
		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업에게 특정 환경 통제기술을 사용케 하는 것, 작업장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케 하는 것 등
		평가	① 피규제자의 순응도 파악 용이, ② 피규제자의 재량이 대단히 낮음
	성과(산출)규제	의의	정부가 목표 달성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예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인체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에 대해 부작용의 허용 가능 수준을 요구하는 것 등
		평가	① 피규제자에게 수단에 대한 재량 부여, ② 정부가 최적의 성과 수준 찾기 곤란
규제의 개입범위	관리규제	의의	정부가 피규제자에게 스스로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선정해 관리를 수행하도록 과정을 통제하는 규제
		예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등
		평가	①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높음, ② 수단규제와 성과규제의 단점 모두 극복
	네거티브규제	의의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형태를 지닌 규제
		형식	‘~할 수 없다’, 혹은 ‘~가 아니다’의 형식
		평가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민간행위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규제의 수행주체	포지티브규제	의의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의 형태를 지닌 규제
		형식	‘~할 수 있다’ 혹은 ‘~이다’의 형식
		평가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 민간행위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규제당국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직접규제	의의	규제 주체인 정부가 피규제자인 민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규제방식
규제의 수혜주체	자율규제	의의	피규제자인 민간이 스스로 합의된 규칙을 설계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규제 방식
	공동규제	의의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 방식(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적 성격)

05.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순응확보전략을 각 유형에 맞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 ㄱ. 황무지를 초지로 개간하여 조사료(bulky food)를 재배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개간한 초지면적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ㄴ. 작업장에서의 안전장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는 TV광고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ㄷ.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을 담아서 배출하는 경우 해당 쓰레기봉투는 수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ㄹ. 이번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명료하게 명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필요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전략 촉진전략 유인전략 규제전략

- | | | | | |
|---|---|---|---|---|
| ① | ㄴ | ㄱ | ㄹ | ㄷ |
| ② | ㄴ | ㄷ | ㄱ | ㄹ |
| ③ | ㄴ | ㄹ | ㄱ | ㄷ |
| ④ | ㄹ | ㄱ | ㄴ | ㄷ |
| ⑤ | ㄹ | ㄱ | ㄷ | ㄴ |

(답) ③ 정책순응의 확보전략으로는 규범적 전략(도덕적 설득), 보상적 전략(유인 및 보상), 강제적 전략(처벌 및 강압 또는 규제), 촉진전략(지도 및 지원)이 있다. ㄱ의 보조금 지급은 보상적 전략인 유인에 해당하며, ㄴ의 TV광고는 규범적 전략인 설득에 해당하고, ㄷ은 강제적 전략인 규제전략에 해당하며, ㄹ의 지원은 촉진전략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정책집행의 순응과 불응

순응	의의	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집행과정에서 저항하지 않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책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현상
	순응의 조건	•정책변수 :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정책의 명료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정치체제 변수 : 정책담당기관의 정통성, 집행담당자의 신뢰성, 정치체제의 능력 등 •순응주체 변수 : 집행담당자의 능력과 태도, 정책대상집단의 능력과 태도 등 •환경 변수 :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적 규범 등
	불응	집행자나 정책대상집단이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련의 정책집행과정의 추진을 반대해 비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책 프로그램의 실현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현상
불응의 원인	의의	① 의사전달의 미흡, ② 정책목표의 모호성과 비밀관성, ③ 적절한 집행수단의 부족, ④ 정책에 대한 불만, ⑤ 순응에 따른 부담의 회피, ⑥ 정책담당기관의 정통성과 권위의 결여, ⑦ 지도력 부족 및 다수기관의 관련성, ⑧ 기존 가치체계와 대립 등
	순응확보 방안	• 규범적 전략 : 도덕적 설득 • 보상적 전략 : 유인 또는 보상 • 강제적 전략 : 처벌 또는 강압 • 촉진전략 : 순응 저해 요인 제거(지도 및 지원)

06. 다음 중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결정상황의 불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결정은 제한된 합리성의 조건하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 ② 점증모형은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합리모형과는 대조적으로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모형이다.
-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의 단점을 합리모형과의 통합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결정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로 정상적인 권위구조와 결정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답) ⑤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07. 다음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어 조례를 통해서 독립적인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자치사법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④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가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라고 할 수 있다.
- 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형 방식을 적용한다.

(답)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이 인정되지만 제한을 많이 받는다. 「헌법」에 의하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세목은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법률로 정해야 한다.

《핵심체크》 자치권의 구성

자치입법권	자치단체가 필요한 조례와 규칙을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자치행정권	지방의 독자적 사무를 중앙의 통제 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자치조직권	-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 - 우리나라 : 「지방자치법」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음 - 현재의 추세 : 표준정원제가 폐지되고 총액인건비제에 이어 기준인건비제가 도입됨에 따라 자주조직권이 확대됨
자치재정권	-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제한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헌법 제59조). 따라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거나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 다만,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35조).
쟁점	국방, 사법, 외교는 국가의 권한이므로 자치국방권, 자치사법권, 자치외교권은 인정되지 않음(영·미 국가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사법권이 인정)

08. 다음 중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령통일의 원리가 배제되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 ② 부서장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공개적이고 빈번한 대면기회가 필요하다.
- ③ 기능부서의 장들과 사업부서의 장들이 자원배분에 관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조직의 환경 영역이 단순하고 확실한 경우 효과적이다.
- ⑤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을 유발하기 쉽다.

(답) ④ 매트릭스 조직은 환경 영역이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이다.

《핵심체크》 매트릭스 조직

의의	계서적 특성을 지닌 기능구조(직능 조직)와 수평적 특성을 지닌 사업구조(프로젝트 조직)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혼합적·이원적 구조의 상설조직
특징	- 기능구조 통제권한의 계층은 수직적으로 흐르고, 사업구조 간 조정권한의 계층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이원적 권한체계를 지닌 조직구조 - 기능구조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사업구조의 신속한 대응성의 필요가 증대되면서 등장한 조직구조 - 조직원은 기능과 사업의 양 조직에 중복적으로 소속되어 기능적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이중명령을 받는 조직구조(명령계통의 다원화)
도입	특수대학원, 대형 연구기관, 종합병원, 대사관 조직,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모두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장점	- 이중구조로 인적자원의 경제적 활용 - 조직원이 다양한 업무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능력발전 촉진 - 조직원의 협동 작업으로 상호이해와 통합 촉진 - 각 기능과 사업별 간 조정이 용이하여 할거주의 극복 - 조직단위 간 정보 흐름의 활성화로 복잡한 의사결정 가능 - 기술의 전문성과 제품라인 혁신 동시 충족(분화와 통합의 조화) - 대규모화되어 가는 조직의 구조적 경직화를 막고 융통성 부여 -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환경(한시적이고 새로운 사업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점	- 이중명령으로 조직원들에게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야기하여 혼란과 갈등 초래 - 지휘계통의 다원화로 조직원의 소속감 결여, 업무처리 혼선 야기, 권한과 책임의 한계 불명확 - 실제 운영에 있어서 기능부서 간 할거주의로 조정 곤란 - 권한구조의 다원화로 관리계층 증가 -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 발생 - 상관의 하급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 불가능 - 조직관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저하 -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결정의 지연 및 과도한 시간 소모

09. 다음 중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현장에서 가치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을수록 이론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연구 대상이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체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는 측면보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려는 측면을 강조한다.
- ③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제도설계와 변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 차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④ 논변적 접근방법의 진정한 가치는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성을 점검하고 상호타협과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있다.
- ⑤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은 연구가 지나치게 기술적(descriptive) 수준에 머물고 정태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답) ③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의 안정성 차원뿐만 아니라 제도설계와 변화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핵심체크》 신제도주의의 유파

구 분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제 도	공식적 제도에 초점	비공식적 제도에 초점	공식적 제도에 초점
선호형성	내생적	내생적	외생적
학문적 기초	정치학	사회학(조직학)	경제학
초 점	국가중심	사회중심	개인중심
강조점	권력불균형, 역사적 과정	인지적 측면	전략적 행위, 균형
제도변화	결정된 균형, 외부적 충격	유질동형화, 적절성의 논리	비용편익 비교, 전략적 선택
방법론	귀납적 연구 (사례연구, 비교연구)	귀납적 연구 (경험적 연구, 해석학)	연역적 연구 (일반화된 이론)
시 각	총체주의	총체주의	개체주의

10. 다음 중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800년대 초반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 ② 옴부즈만은 입법기관에서 임명하는 옴부즈만이었으나 국회의 제청에 의해 행정수반이 임명하는 옴부즈만도 등장하게 되었다.
- ③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외의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 ⑤ 시정조치의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비행의 시정이 비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답) ④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옴부즈만의 일종이다.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

목적 및 소속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근거법률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기능	① 고충처리기능, ② 부패방지기능, ③ 행정심판기능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장과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직을 겸임할 수 없음
특이점	국민고충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조사(조사권 있음)가 가능하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조사기관이 불기소처분 한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음.

11. 다음 중 국민경제활동의 구성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고위정책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예산의 분류로 옳은 것은?

- ① 기능별 분류 ② 품목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활동별 분류
⑤ 사업계획별 분류

(답) ③ 설문은 경제성질별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체크〉〉 예산의 분류

품목별 분류	의의	지출대상(품목)별로 분류하는 방식(우리나라의 '목')
	특징	행정학 성립 초기에 강조된 분류방식으로 보통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하여 활용
	장점	① 예산집행자의 회계책임 명확, ② 인사행정에 대한 유용한 자료·정보 제공, ③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 용이, ④ 행정통제 용이, ⑤ 명세계정에 적합
	단점	① 정부지출의 전체규모·지출목적·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② 예산집행의 신속성 저해, ③ 새로운 사업의 창안이나 촉진 곤란, ④ 국민의 이해 곤란, ⑤ 지나친 세분화로 번문복례 초래(총괄계정에 부적합), ⑥ 사업의 성과파악 곤란
기능별 분류	의의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우리나라의 '장', '관')
	특징	·세출예산에만 적용이 가능 ·기능별 분류의 대항목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음 ·시민이 국가예산에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분류 ·사업별·활동별 분류와 연계되므로 성과주의예산에 가장 적합 ·예산의 전체 윤곽을 밝히는 데 유용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예산개요(나라살림)의 작성에 활용
	장점	① 국민의 정부활동에 대한 이해 용이(시민을 위한 분류), ② 의회의 예산심의 용이, ③ 행정수반의 예산정책 수립 용이, ④ 정부활동의 우선순위 파악 용이, ⑤ 장기간에 걸친 정부활동 분석 용이, ⑥ 총괄계정에 적합 등
	단점	① 회계책임 확보 곤란(입법통제 곤란), ② 기관별 예산의 흐름(정부예산의 유통과정) 파악 곤란, ③ 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파악 곤란, ④ 특정사업이 두 개 이상의 기능에 속하는 경우 분류 곤란
조직별 분류	의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단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장점	① 입법부의 예산통제 용이, ② 경비지출의 책임소재 분명, ③ 예산과 정단계의 명확화, ④ 국회의 예산심의 용이, ⑤ 비교적 총괄계정에 적합, ⑥ 주체별 구분으로 예산집행 용이
	단점	① 경비지출의 목적 파악 곤란, ② 예산의 경제적 효과 파악 곤란, ③ 조직 활동의 성과 파악 곤란, ④ 사업계획의 효과 평가 곤란, ⑤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 곤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조직별 예산편성단위는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일치하지 않음 ·세출예산서상 중앙관서의 수와 세입예산서상 중앙관서의 수가 일치하지 않음
경제 성질별 분류	의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식
	장점	①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② 국가 간 예산 경비의 비중 비교, ③ 정부예산의 국민경제적 효과 파악 용이, ④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용이
	단점	①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 측정 가능, ②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하여 사용, ③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유용하지 않음, ④ 소득배분·산업부문별 영향분석 등은 불가능
	우리나라	통합예산, 재정충격지표, 국민경제예산, 완전고용예산 등

12. 다음 중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운송사업은 지방직영기업 대상에 해당된다.
②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법인 등)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답) 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

〈〈핵심체크〉〉 지방공기업

의의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대상사업	①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만 해당), ⑥ 하수도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성과계약 : 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음 ·경영평가 : 행자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감사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를 받음

13.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품목별 예산제도(LIBS) - 지출의 세부적인 사항에만 중점을 두므로 정부활동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다.
ㄴ.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지 않아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없다.
ㄷ. 기획예산제도(PPBS) - 모든 사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
ㄹ. 영기준예산제도(ZBB) - 모든 사업이나 대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문서자료가 요구된다.
ㅁ. 목표관리제도(MBO) -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집권적인 경향이 있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답)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예산배정 과정에서 필요사업량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할 수 있다(ㄴ). 목표관리제도(MBO)는 예산결정 과정에 관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분권적인 경향이 있다(ㅁ).

14. 다음 중 시장실패 또는 정부실패를 야기하는 원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 ① 공공재 - 정부보조 삭감
②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규제
③ 자연독점 - 규제완화
④ 관료의 사적 목표의 설정 - 공적유도
⑤ 정부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효과 - 공적공급

(답) ②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정부규제와 공적유도이다.

〈〈오답정리〉〉

- ① 공공재 - 공적공급
③ 자연독점 - 정부규제
④ 관료의 사적 목표의 설정 - 민영화
⑤ 정부개입에 의한 파생적 외부효과 - 규제완화, 보조금 삭감

〈〈핵심체크〉〉 시장실패와 대응방안

유형	내용	대응방안
공공재의 존재	시장에서 공공재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생산의 유인이 없어 과소생산됨으로써 시장실패 초래	·공적공급
자연독점의 발생	시장에는 자연독점산업(비용체감산업, 규모의 경제, 수익 체증산업)이 존재하며, 자연독점산업은 과소생산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시장실패 초래	·공적공급 ·정부규제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무지(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편재, 정보의 불균형)로 인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어 시장실패 초래	·공적유도 ·정부규제
외부효과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의 부수효과를 외부효과라 하며, 정의 외부효과는 과소생산을,負의 외부효과는 과다생산을 야기하여 시장실패 초래(외부성)	·정의 외부효과 - 공적유도 ·負의 외부효과 - 정부규제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기술적 우위 등으로 독과점이 형성되며, 독점 기업들은 과소생산을 통한 초과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시장실패 초래	·정부규제
분배의 불공평	시장은 빈익빈·부익부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실패 초래	
경기변동	시장은 반복적인 경기 호·불황을 야기하여 시장실패 초래	

〈〈핵심체크〉〉 정부실패와 대응방안

유형	내용	대응방안
사적목표의 설정(내부성)	의의	·민영화
	양태	
파생적 외부효과	의의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원인	

X-비효율성 (공급비용 체증)	의의	독점으로 인한 관료들의 관리상·기술상·행태상의 비효율성	• 민영화 • 정부보조 삭감 • 규제완화
	예	① 무사안일·복지부동, ② 도덕적 해이·소극적 업무행태·최신기술에의 부적응 등	
권력의 편재		정부가 규제권한 등을 통해 권력과 특혜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의 불형평	• 민영화 • 규제완화
비용과 수익의 절연	의의	편익집단과 비용집단의 단절로 공급자인 정부는 원가개념 없이 과잉생산하고 소비자인 국민은 비용에 대한 인식 없이 과잉 소비하는 현상	
	유형	• 미시적 절연 : 소수가 관료포획 등을 통해 다수를 이용(규제정책) • 거시적 절연 : 국민 다수가 투표권을 통해 소수를 이용(재분배정책)	
기타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정치인 및 관료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문제의 인지, 정책결정, 효과의 발생 등 시차로 인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15. 다음 중 딜레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부활동의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부가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촉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 ② 전략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시민과 지역 공동체 집단들 사이의 이익을 협상하고 중재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이다.
- ③ 정부신뢰를 강조하고, 정부신뢰가 정부와 시민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행정이론이다.
- ④ 시차를 두고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들의 속성이나 행태의 연구가 행정이론 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행정현상 연구에 적용하였다.
- ⑤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 상황이 야기되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것을 통해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하였다.

(답) ⑤ 딜레마 이론이란 상황의 특성, 대안의 성격, 결과가치의 비교평가, 행위자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곤란한 딜레마 상황에서 대안의 선택 방법을 규명하는 행정이론이다. ①은 신공공관리론을, ②는 신공공서비스론을, ③은 사회적자본론을, ④는 시차이론을 의미한다.

〈핵심체크〉 정책딜레마(딜레마 이론)

의의	정책결정을 해야 하지만 상충되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	
구성요소	분절성	대안들이 상충적이어서 절충이 불가능
	상충성	대안들을 함께 선택할 수 없음
	균등성	대안들이 가져 올 결과가지 또는 기회손실이 비슷함
	선택 불가피성	최소한 하나의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함
행태적·상황적 발생조건	① 갈등적인 정책 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할 경우, ② 갈등 집단 간의 권력균형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 ③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한 경우, ④ 대안선택에 걸린 이해관계가 큰 경우, ⑤ 특정 대안의 선택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⑥ 정책문제에 대한 정부조직의 관할이 중첩되는 경우, ⑦ 갈등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 ⑧ 갈등적 대안들을 대체할 방안들을 만들 수 없는 경우	
대응방안	소극적 대응	결정의 회피 및 지연, 책임의 전가, 상황의 호도 등
	적극적 대응	새로운 딜레마상황 조성, 스톱-고 정책, 상징조작 등

16. 다음 중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적 통제는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간다.
- ② 통제주체에 의한 통제 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이다.
- ③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국회, 법원, 국민 등에 의한 통제이다.
- ④ 사후적 통제는 목표수행 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이다.
- ⑤ 부정적 환류통제는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이다.

(답) ① 통제는 시점에 따라 사전적 통제, 동시적 통제, 사후적 통제로 구분된다. 이중 동시적 통제는 목표수행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이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종해 나가는 통제이다. 즉,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가는 통제이다.

〈핵심체크〉 통제의 유형

통제의 시점에 따른 분류	사전적 통제	목표실행행동이 목표에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처리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는 통제(예방적 통제)
	동시적 통제	어떤 행동이 통제기준에서 이탈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교정해 나가는 통제(목표수행 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것이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종해 나가는 통제)
	사후적 통제	목표수행 행동의 결과가 목표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통제
시정조치에 의한 분류	긍정적 환류통제	실적이 목표에서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정하는 통제
	부정적 환류통제	실적이 목표에 부합되는 것을 발견하고 후속되는 행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정보를 환류시키는 통제
통제주체에 따른 분류	외부적 통제	대중, 입법부, 사법부, 정당 및 압력단체 등에 의한 통제
	내부적 통제	일반계서,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 의한 통제

17. 다음 중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해소방법으로는 문제 해결, 상위 목표의 제시, 자원 증대, 태도 변화 훈련,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 ② 적절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 정보전달 억제, 구조적 요인의 개편, 리더십 스타일 변경 등을 들 수 있다.
- ③ 1940년대 말을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널리 받아들여졌던 행태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 ④ 마치(March)와 사이먼(Simon)은 개인적 갈등의 원인 및 형태를 비수락성, 비비교성, 불확실성으로 구분했다.
- ⑤ 유해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답) ② 인사교류, 조정 담당 직원 또는 기구의 신설, 이의제기 제도의 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조직단위의 합병,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의 분리, 지위체제의 개편, 업무배분의 변경, 보상체제의 개편 등을 의미하는 구조적 요인의 개편은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핵심체크〉 갈등관리

예방 및 해소전략	• 개인적 특성에 의한 갈등 : 역할연기·감수성 훈련 등의 교육훈련, 고충해결 장치의 마련 등 • 분업구조로 인한 갈등 : 구조적 요인의 개편 - 갈등 부서 간 통폐합, 직급교육 강화, 공동교육훈련, 인사교류 등 • 목표의 차이로 인한 갈등 : 상위목표의 설정, 목표의 차별화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 등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갈등 : 더 많은 자원의 확보, 자원배분기준의 명확화 등 • 업무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갈등 : 부서 간의 접촉 필요성 완화 • 관할 영역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 업무수행의 목표·절차·규칙 등의 정형화(표준운영절차) • 기타 : 공동의 적 설정, 평가기준과 보상시스템의 명확화, 계층제에 의한 명령과 강제 등 • 사이먼(Simon)과 마치(March) : 문제해결, 설득, 협상, 전략 • 토마스(Thomas) : 회피, 순응, 경쟁, 타협, 협동
	• 외부인의 영입 : 개방형임용제 등의 활용 • 경쟁의 조장 : 성과급제, 현장마케팅 등의 활용 • 불확실성의 제거 : 기존의 관행에 변화를 주거나 위기감 조성 • 권력의 재분배 :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의 재설정 • 기타 : 수평적 문화의 촉진 및 정보조절(정보전달통로의 변경), 리더십 스타일의 변경 등

18. 다음 중 위원회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다.
- ② 자문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없다.
- ③ 토론과 타협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상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다.
- ④ 위원 간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다양한 정책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비교적 용이하다.

(답) ①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지닌 행정위원회와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지니지 않는 자문위원회의 중간조직으로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으나 집행력은 없다.

〈〈핵심체크〉〉 위원회제

개념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합의제 조직		
특징	① 합의제조직, ② 계층제의 완화와 분권화, ③ 민주적 성격, ④ 탈관료제 조직		
유형	행정위원회 (협의)	개념	독립지위를 가진 행정관청으로 법률에 의해 설치되며,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권을 보유하는 위원회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의결위원회	개념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협의)의 중간조직으로 의사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집행권이 없는 위원회
		예	각 부처 장계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개념	참모기관으로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조정위원회	개념	기관 간 또는 기관 내의 부서 간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통합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예	차관회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독립규제위원회	개념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준입법권, 준사법권을 가지고 경제 및 사회의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발달	① 행정권의 비대화 방지, ② 규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예	미국의 독립위원회와 완벽하게 동일한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음

19. 다음 중 정부운영에서 예산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산출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다.
- ② 예산은 정부정책 중 보수적인 영역에 속한다.
- ③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 ④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서 기회비용이 우선 고려된다.
- ⑤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프로그램 예산, 기획 예산, 성과주의 예산, 영기준 예산 등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답) ⑤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 영기준 예산, 프로그램 예산 등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핵심체크〉〉 예산의 특징

개념	1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예산의 실질적 개념)로서 국회의 재정동의권이 부여된 형식(예산의 형식적 개념)	
본질	예산은 정책과 사업의 금전적 표현	
특성	①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의 이중 결정, ② 조직 상태에 대한 묘사, ③ 정치·경제학적 성격(정치적·권력적 측면과 합리적·경제적 측면 모두 작용), ④ 정부활동의 관리도구 및 평가기준, ⑤ 정보창출도구, ⑥ 자원·활동·결과 간의 인과적 과정의 설명 도구, ⑦ 정부정책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 ⑧ 관료의 회계책임 확보 도구	
재정민주주의 (빅셀)	의의	• 협의 :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의결한대로 행해져야 함 • 광의 : 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운영을 민주화하여 납세자주권을 확립해야 함
	방식	• 사전적 참여 : 예산결정과정에서의 참여 - 공청회와 청문회, 시민대표의 위원회 참여, 재정수요의 조사, 재정정보의 공개, 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제도 등 • 사후적 참여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참여 - 정보공개 청구, 주민감사청구, 내부고발자 보호, 주민소환제도, 납세자소송제도(주민소송제도), NGO의 예산감시운동 등

20.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 ㉤.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제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ㅈ
② ㄱ, ㄴ, ㅋ
③ ㄱ, ㅈ, ㅊ
④ ㄴ, ㅈ, ㅊ
⑤ ㄴ, ㅋ, ㅌ

(답) ④ 소관상임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이를 심사할 수 없다(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지 아니한다(ㄴ).

〈〈핵심체크〉〉 국회의 예산심의

의의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검토하고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
기능	① 정책형성 기능, ② 행정부의 감시·통제기능, ③ 의원들의 당파적 이익이나 지역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④ 한정된 가용자원의 합리적 배분 수단
한계	• 한계적 조정과 수동적 역할 : 정책이나 사업의 근본적 변경보다는 예산 금액의 한계적 조정에 치중(대부분 1% 내외에서 수정됨) • 선형성과 점증성 : 국회의 예산 승인액과 다음연도 행정부의 예산요구액 간에는 선형적 함수관계(점증성)
절차	① 국정감사 ⇒ ② 대통령의 시정연설 ⇒ ③ 상임위의 예비심사 ⇒ ④ 예결위의 종합심사 ⇒ ⑤ 본회의 의결
상임위의 예비심사	•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음 • 상임위와 부처는 예산편성에 대한 연대의식을 지녀 비영합개입의 관계 형성(상임위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지향성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팽창지향성을 띰)
예결위의 종합심사	•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이지만 상설위원회이므로 활동기간을 정하지 않음 • 「국회법」에 의하면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국회법」에 의하면 예결위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본회의의 의결	•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의결로 확정되며, 공포절차는 불필요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므로 「헌법」상 예산심의기간은 60일, 「국가재정법」상 예산심의기간은 90일
우리나라의 특징	• 대통령제의 예산심의 : 의원내각제보다 예산심의가 보다 엄격 • 위원회 중심 예산심의 : 본회의보다는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의 예산심의 •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팽창지향성,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감축지향성 • 예산 및 기금의 수정권한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나 새 비목을 설치하지 못하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함(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폐지·삭감권만 지남) • 기타 : 예산의결주의, 심의과정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예산증액 발생, 심의기간 도과 빈번 등

21. 다음 중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다.
- ③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는 부패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⑤ 모든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답) 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체크〉〉 공무원의 윤리규범

적극적 윤리 규범	「공무원헌장」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특징	① 적극적·추상적 윤리규범, ②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음
	「국가공무원법」	•13대 의무 - ① 성실 의무, ② 선서 의무, ③ 복종 의무, ④ 직장이탈 금지 의무, ⑤ 친절·공정 의무, ⑥ 영리·겸직 금지 의무, ⑦ 종교 중립 의무, ⑧ 비밀 준수 의무, ⑨ 청렴 의무, ⑩ 품위유지 의무, ⑪ 영예 등 제한, ⑫ 정치적 중립 의무, ⑬ 집단활동 금지 의무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국가 및 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함(공기업 및 공직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포함)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이해충돌방지 의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체결,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 변경 신청 등을 해야 함
소극적 윤리 규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부패신고 의무 :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함 •국민감사청구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당면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내부고발자 보호
	특징	① 소극적·구체적 윤리규범, ② 타율적이지만 구속력과 실효성 높음

22. 다음 중 정책참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원주의는 개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
- ② 조합주의(corporatism)는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 ③ 엘리트주의에서는 권력은 다수의 집단에 분산되어 있지 않으며 소수의 힘 있는 기관에 집중되고, 기관의 영향력 역시 일부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철의 삼각과 같이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 ⑤ 정책공동체는 일시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집합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시각을 반영한다.

(답) ① 다원주의는 집단차원에서 정책결정에의 영향력 행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집단주의라고도 한다. 잠재적이익집단론, 중복회원이론, 공공이익집단론 등 고전적 다원론의 주요이론들은 이익집단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핵심체크〉〉 다원주의(집단이론)

개념	권력은 다양한 이해관계세력에게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이들은 정책형성을 위한 영향력 행사에 동일한 정도의 접근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이론	
주요 이론	• 고전적 다원주의론 : 잠재적이익집단론, 중복회원이론, 공공이익집단론 • 다알(R. Dahl)의 다원론	
특징	권력의 분산	권력은 다양한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분산된 불평등의 형태를 지님
	동등한 접근기회	• 각종 이익집단은 정부 정책에 동등한 접근기회를 지님 • 다만, 정부의 차별적 접근허용이 아닌 이익집단 내부의 문제(구성원의 수, 재정력, 응집력 등)로 인하여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
	경쟁과 균형	이익집단 간에는 게임의 규칙에 따른 경쟁이 이루어지며, 잠재적 이익집단의 존재와 이익집단내의 중복가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룸
	정부의 역할	• 브로커형 국가 :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 중립국가관 : 게임의 규칙을 형성하고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 • 풍향계 정부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역할

23. 다음 중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적 접근법은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② 특성론적 접근법은 성공적인 리더는 그들만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 ③ 상황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 ④ 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 과정이나 교환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영감(inspiration) 등을 강조한다.

(답) ③ 행태론적 접근법은 리더의 어떠한 행동이 리더십 효과성과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상황론적 접근법은 상황에 따른 효과적 리더십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핵심체크〉〉 리더십

의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의 개인과 집단을 유도하고 조정하며 행동케 하는 기술		
연구	인간관계론에서 시작되어 행태론에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발전행정론에서 본격화		
이론의 변천	자질론	의의	리더 개인의 타고난 자질에 초점을 둔 고전적 연구(속성론, 특성론)
		한계	•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 •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자질 규명 실패 • 지도자가 되기 전과 된 후의 자질이 사실상 동일한 것에 대한 설명 불가능
	행태론	의의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리더의 행태 연구
		모형	• 아이오와 대학(White & Lippitt) : 민주형 리더십 중시(1차원) • 미시간 대학(Likert) : 부하중심 리더십 중시(1차원) • 오하이오 대학 : 높은 조직화와 높은 배려 모두 중시(2차원) • 블레이크 & 모우튼의 관리방 : 인간지향과 과업지향 모두 중시(2차원)
		한계	•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의 자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 • 2개 요인분류법으로 리더십의 유형을 지나치게 단순화 함
	상황론	의의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 연구
		모형	타넨바움과 스미트의 상황이론, 휘들러의 상황이론,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목표이론, 그랜과 댄저로우의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이론, 레딘의 3차원 모형, 허쉬와 브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대체물이론, 유클의 다중연결모형 등
		한계	• 한 두개의 상황변수만을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화 곤란
	신자질론	의의	리더의 학습되는 자질을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최근의 리더십 연구(신속성론, 신특성론)
모형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셀프 리더십과 슈퍼 리더십, 상호연계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 등	

2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A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 甲
 ㄴ. B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 중인 비서관 乙
 ㄷ. 국토교통부에서 차관으로 근무 중인 丙
 ㄹ. C 병무청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丁
 ㅁ.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는 戊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답) ④ 순경(ㄱ)과 군무원(ㄹ)은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국회의원 비서관(ㄴ)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고, 정부부처의 차관(ㄷ)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의의		실적과 자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종류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1급에서 9급으로 구분, 다만 연구직은 연구관과 연구사,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 2계급으로 구분되며,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없이 직무등급으로 구분됨) - 일반직 공무원 확대 : 임기제공무원(기존 계약직), 전문경력관(기존 별정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선관위상임위원(기존 별정직)도 일반직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경찰·소방·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청장, 경찰총장 포함)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의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력직 외의 비직업공무원
	종류	정무직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국회임명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등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 장·차관, 처장, 청장, 기타 차관급 공무원과 특별시의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법령 : 차관보,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사석전문위원 등 - 조례 : 지방의회전문위원 등

25.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치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③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는 처리하는 데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④ 지방사무에 관해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중앙정부 위임사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⑤ 주민의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답) ② 단체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이중의 지위를 갖지만, 주민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만을 갖는다.

〈핵심체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 미	정치적 의미(민주주의의 원리)	법률적 의미(지방분권의 원리)
국 가	영국·미국	독일·프랑스
자치권의 인식	자연적·천부적 권리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자치권의 범위	광범위함	협소함
자치권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참여에 초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사무배분에 초점)
권한부여방식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지방정부 구성형태	기관통합형(의회우월형)	기관대립형(집행기관우월형)
사무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미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조세제도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중앙과 지방의 관계	기능적 상호협력관계	권력적 감독관계
자치단체의 지위	순수한 자치단체	이중적 지위(자치단체+일선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많음	적음
통 제	주민통제(아래로부터의 통제)	중앙통제(위로부터의 통제)
민주주의와 관계	상관관계 인정설	상관관계 부정설
국가공무원	없음	있음
위법통제	입법적·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